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새해 첫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3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3명 전원은 개혁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기에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번째로 ‘연금개혁’은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1년도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극심한 부담감에 연금개혁을 주저한 사이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살피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아래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창조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새로운 인식,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정부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깊게 도모한다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용래 강원도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강원도협의회장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농업 ESG,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길

경향신문 오피니언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조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책임성 있는 경영을 말한다. 경제 전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 농업 ESG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민이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작물 재배 방식을 채택해 토양오염과 자원 소모를 줄이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배합해 만든 천연 농약을 권장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도 필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의 증가는 농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농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된다.

사회(S) 분야에서는 농촌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지역에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교육 및 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하며,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 혁신을 이끌어 주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농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농민들의 선순환 경제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생산된 농작물의 품질과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거래 과정에서 농민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농가의 ESG 경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차별화 전략을 기획할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 생애주기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긴 뒤에 블록체인과 RFID(무선식별장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촬영해둔 기록정보를 토대로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농산물을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상거래)를 통해 농장이나 상품을 소개한 뒤 유통하는 플랫폼이 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한 커머스도 있고,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밴드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도 있다. 이러한 거래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높일 수 있다.

농촌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함께했다. 우리 조상들은 계를 조직해 두레나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도왔다. 계를 통해 일정한 목적 아래 돈이나 곡식, 옷감 등을 모아 빌리면 이자로 수익을 내고 계원끼리 이용하는 것이다. 둠병도 있다.

주로 천수답에 의존해 벼농사를 지을 때 임시로 용수를 가두어 두는 물 저장고를 말한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이 일 때는 저장해둔 물로 물 부족을 해소한다. 심지어 다양한 생물이 존재해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한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선조들의 지혜를 새롭게 해석해 농민을 위한 ESG 경영에도 적용했으면 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 구체화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조항 대폭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금)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연예기획사 등이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 개정안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은 시대적 과제, 민간·현장 소통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모색

-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 -
- 다각적인 주거 지원 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간구조 재구성 등 논의 -
- 정기적 회의 개최와 정책 수요자 소통으로 정책 지속 발굴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20일(목) 오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신혼부부·양육·고령가구 등 맞춤형 주거 지원, 이동서비스 고도화 및 교통안전 강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각 분야 전문가와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8일(화) 개최되었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자 하는 원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개최되었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라고 당부한 만큼,
 - 이번 회의는 인구, 주거·도시,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등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상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우혜경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 참석자들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위원들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정책과 함께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어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고령 가구 주거 지원, 계층·지역별 이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주거 서비스 개선, 교통·문화시설·일자리 등 고령자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위원들은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일자리·인프라 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축 도시’ 개념을 활용하여 하나의 시설에 여러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위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 당사자들인 2030 세대, 고령층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세대별 분절적인 접근보다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 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실무 TF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정책 당사자와의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보편적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시대적 과제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 높은 대책을 고심해야만 할 때”라며,
 - “앞으로도 전문가,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과의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가동하여 의미 있는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
- 쌍둥이(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등 -

-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편,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30일을 더하여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모두 1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의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고 경 훈 | 지방의정연구 센터장

-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지방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 도입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배치 및 복무형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와 사무처(국/과) 중 의회별 여건에 따라 배치 형태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배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제38조 제5항은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라고 규정함

■ 위원회형

- (배치)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전문위원히 관리하는 형태
- (복무) 정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사무처장이 관리

- 장점

-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 전문성 강화에 유리
- 의원 가까이에서 근무함으로써 의원 관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의원과의 친밀감이 증대, 시의적절하고 현실감 있는 지원을 통하여 의원과의 소통 강화

- 단점

- 전문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상임위원회 안전심사 등의 전문위원실 일상 업무로 인하여 정책개발 중심의 정책지원 업무를 위한 시간, 작업환경 등 여건이 어려울 수 있음. 정책지원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심도 있는 정책발굴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지방의회 각 위원회에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기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 업무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입법지원 차원에서 조례 성안 업무를 하고, 또 다른 부서원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게 된다면, 조례안 성안과 검토 보고를 모두 전문위원이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업무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지방의회는 통상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구분해 (院)구성을 하게 되고, 전반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 시 해당 의원의 소속 위원회가 변경될 때에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보 또는 인사이동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보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의원과의 유대감 강화로 인해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도 있음

■ 사무처형

- (배치) 사무기고 내 별도 부서, 팀에 배치하여 관리

① 별도 관리 조직 없이 기존 조직 내에서 관리

- 기존 부서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지원관 배치, 관리

- 정책지원관 수가 12명 미만인 시·군·구의회 등 소규모 지방의회 및 위원회가 없는 지방의회에 적합

② 정책지원관의 복무관리를 위한 별도 담당관 또는 과 신설

- 정책지원관이 20명 이상 대규모 의회로, 기존 조직으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적합

③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위한 팀 신설

- 일반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이상인 시·군·구의회 중간 규모 의회에 적합

- 시도의회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등 기존 부서 내에 팀을 신설, 시·군·구의회의 경우 사무국·과장 직속으로 신설 가능

- (복무)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 장점

- 정책지원관 복무관리 통제가 가능하고 의원 개인의 보좌관화 방지 유리
- 정책연구 차원에서 집중력이 강화되고, 자율적·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가능
- 전문 위원실 소관의 일상 업무로 인한 시간 및 주변 여건 악화 없이 정책지원 업무에 대한 집중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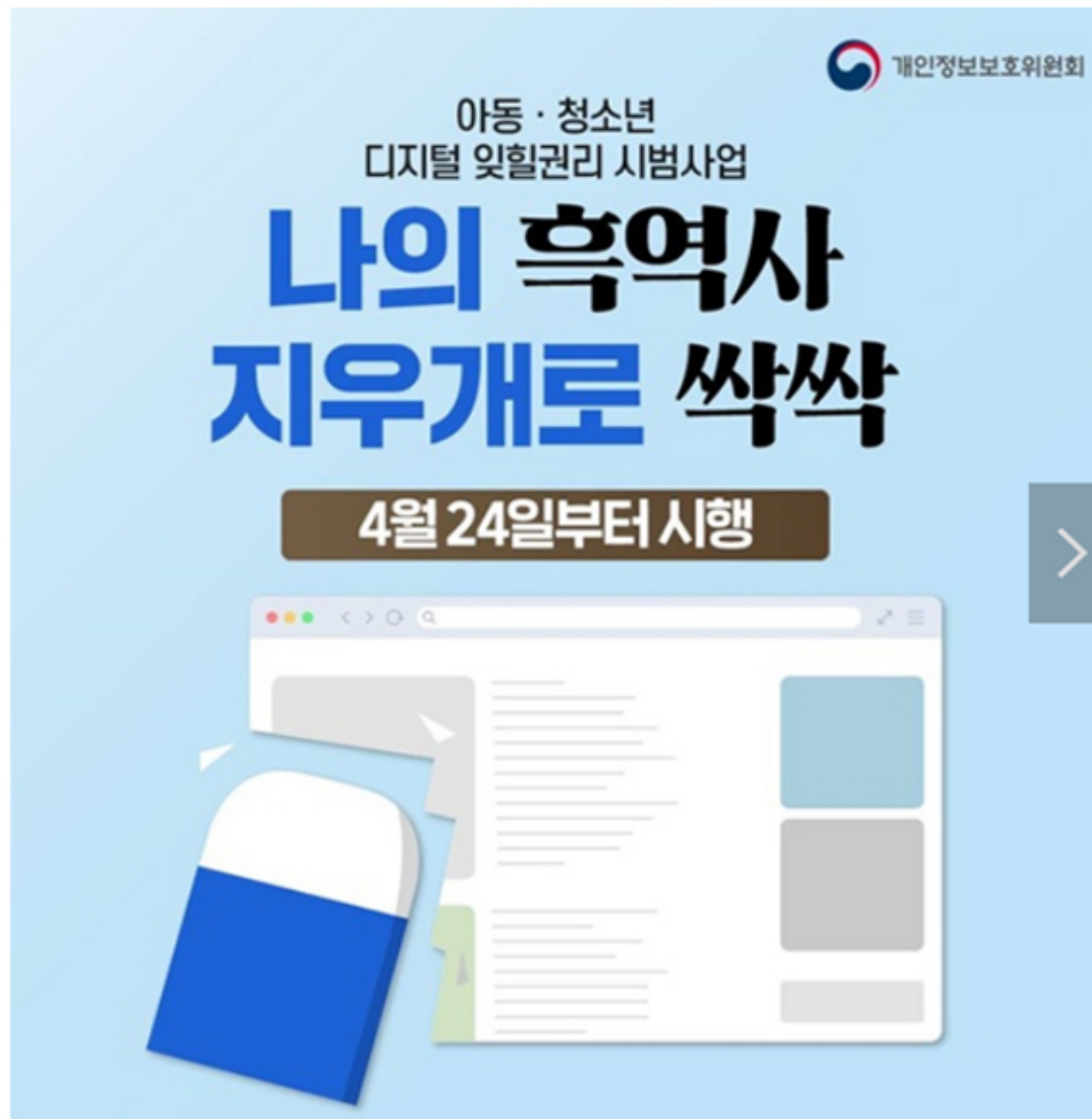
- 정당이 서로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할 경우 정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갈등과 혼란 발생 우려
-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지휘·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 일반업무와 관련해서는 의회 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지휘·명령체계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선 우려
- 사무기구 배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과는 다른 차원의 지휘·명령체계 구축 필요, 성과 평가를 위해서도 의원 및 사무기구의 장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령 또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 필요
- 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업무 요청을 할 경우 의원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고, 의원 관심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밀착 지원 애로

■ 종합

- 정책지원관의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의 배속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별 의회 상황과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 취지를 반영하고 의원의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위원회보다는 의회 사무기구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지방의회의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칙에 따라 내년에 우선 채용하게 될 정책지원관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 조지를 재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경훈 지방의정 센터장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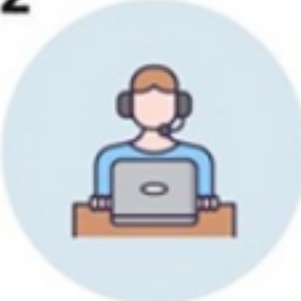
1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

+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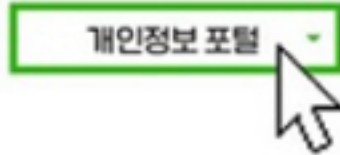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
1
2
3
>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한다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우개초 5학년 3반 김지킴
중간고사 성적나와서 한잔했다

주민등록증
김지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신청자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
(마스킹처리한 신분증, ID, IP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자기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 진행

지우고 싶은 게시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